

국회 공전에 예산안 시한내 처리 무산



“민생 저버린 한국당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소켓 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필리버스터 사태에 파행...5년 연속 지각처리 불명예 유치원3법·민식이법도 발목...민주, 한국당 뺀 여야 공조 압박

여야의 벼랑끝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처'로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2일 무산됐다.

이로써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2014년)된 이듬해인 2015년부터 5년 연속 헌법에 규정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예산에 대해서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필리버스터 대처사태를 초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이 선거법에 이어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반

면, 한국당은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지지 투쟁'이 불가피하다면서 맞섰다. 정기국회 종료(10일)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대치는 오히려 더 격화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헌법에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나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무산될 것과 관련, 서로 상대편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을 불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이렇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면서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

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200여개 법안에 딱치는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조건없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전날 여야3당 예정위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협의체의 예산심사가 예정되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한국당 의원들은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檢수사관 유서 “윤석열, 내 가족에 배려를”

검찰 출석 앞 극단적 선택...檢 과도한 압박 의혹 제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한때 일했다가 검찰 수사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이 남긴 유서에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어린 소식통에 따르면 A 수사관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죄송하다'는 부분과 함께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A 수사관 사망 직후 가족과 윤 총장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가족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는 내용이 추가로 알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여론에서는 A 수사관의 사망 이면에 별건 수사 등 검찰의 과도한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여론 및 청와대와 검찰 간에 A 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놓고

지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방증도 나타나고 있다. A 수사관의 유서는 9장 분량으로, 가족과 친구, 자녀, 윤 총장 등에게 각각 전하는 내용을 짧게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당의 다른 의원은 "검찰은 지금 조여오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막아보려 검찰 전체의 명운을 걸고 이 정권과 한판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해석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성 보도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은희 바른미래 탈당 시사

“3지대서 노력”... ‘변혁’ 창당 전 연쇄 탈당 전망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광산) 의원이 2일 "저는 20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아닌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제3지대에 기대되는 노력을 하겠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권 의원은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참여해 신당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당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제3지대에 기대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비록 (당 소속이 아닌)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는 활동을 할지라도 국민들의 상식, 현재와 미래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끝까지 하겠다"고 했

다. 권 의원이 탈당을 강력 시사함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된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 전까지 집단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을 포함한 비당권파 의원 4명을 징계한 데 대해 "순환규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 원내대표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에는 전날 징계가 결정된 오신환-유승민-권은희-유의동의원을 포함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15명 전원이 회부되었는 상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총선 예비후보자 5대 기준 해당시 불이익

부정부패 연루·혐오 발언·젠더 폭력·입시부정 등 검증소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총선 출마자들로부터 부정부패 연루·혐오발언·젠더폭력·입시부정 등과 관련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이들이 내야 하는 검증 심사비는 100만원으로, 20대 정년들에게는 이를 전액 면제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 공식선정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위원장 김경협 의원)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검증위는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총선기획단 산하 2개 소위를 구성했다.

검증위는 오는 3~8일 6일 동안 예비후보자 1차 공모를 진행한다. 2차 공모기간은 잠정 18~23일이다. 진 전 의원은 "2차 공모기간에는 1차때 참여하지 못한 분과, 현역 의원 중 21대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

들의 신청을 받을 것"이라면서 "과거 현역 의원은 검증 없이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이 기간에 다 (검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1·2차 검증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내년 1월 2~5일 3차 공모를 시행한 후 1월 11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마쳐 공천관리위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한편, 진 전 의원은 현재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인 총선 출마 희망자의 경우, "현장조사소위에서 케이스 별로 검증할 것"

이라며 "혐의가 명확할 경우, 부적격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논란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소위의 조사 내용 등을 적시해 공심위나 최고위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은 자격검증시 문제가 되지 않는냐는 질문에 진 전 의원은 "부동산 취득이나 매각이 법률적 결정사유는 아니다"라면서 "검증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적격인가를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변인이) 본인 출마의지가 있다면 다른 문제"라며 "정치적 성격의 문제나 판단은 공천관리위에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소득 하위 40%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기초연금법 복지위 통과... 다음달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기초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연금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의결했다. /연합뉴스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정시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정신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 계		2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평생교육학과(M.Ed.)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